



## 국제화시대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농민조직을 중심으로 —

단국대 교수 김 동 희

### 1. 국제화 개방화는 농민에게 무엇인가.

-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국제화의 길을 걷게되며 상호신용도가 높아진 세계적 경쟁체제의 부분으로 편입.
- 국내산업은 세계시장지향적 대기업중심의 산업(수출산업, 다국적기업등)과 내수시장지향적 중소기업 또는 농업등으로 양극화 현상 진행.

- 이러한 분극화는 무역자유화가 진행되면 이해대립이 점점 날카로워짐.
- 만약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농업과 제조업간에 산업적 연관이 두텁게 형성되기전에 개방화가 확대되면 양극화된 산업간의 이해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지게 됨.
- 만약 기술력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뒤떨어진 상태에서 무역자유화가 된다면 외수위주산업의 해외이동으로 산업공동화현상이 진행되고 불가피하게 대외

종속이 심화될 것이고 내수위주산업(농업등)의 기술 혁신과 구조정책이 미진하면 붕괴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도시화 및 소비자대중의 구매력 향상, 실생활의 서구화, 정보사회화는 소비문화의 국제화를 촉진시켜 국내농산식품에 대한 시장을 좁힐 우려가 있음.

이상과 같은 제변화는 소농체제하에서 불확실성을 높아지게하고 경영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살아남기 위하여」 전방위적 대응노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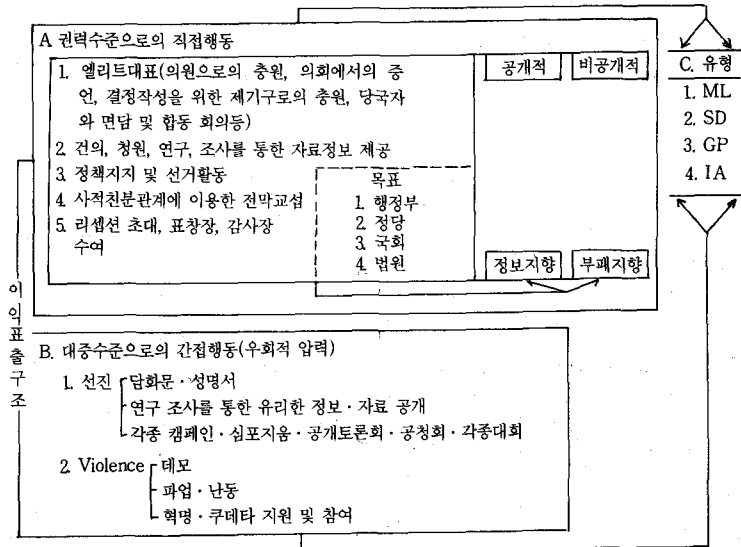
## 2 이익집단의 기능과 분화

협동조합을 포함한 농민단체는 경제적 기능만이 아니라 이익을 대변·대표하는 기능까지 기대하고 있는 바, 먼저 일반론적 분석을 통하여 농민단체의 질적 전환의 기초를 설명코저 한다. 1960년대이래 적

어도 87년 6.29선언이 나올 때까지 한국의 정치, 경제운영을 행태적으로 보면 국가가 거의 유일한 독립 변수로서 농정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정권유지와 설정된 국가목표 달성을 위하여 통제를 가하고 균등을 동원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그리하여 경제사회변동에 의하여 그동안 몸집이 커진 농민을 포함한 각계의 중간층이나 근로대중의 자생적 민주적 이익집단은 탄생·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정권옹호적인 「만드러진 이익집단」만이 존립이 허용되었다.

각종사회집단의 이익표출을 G.A Almond의 모델(그림)에 의하여 설명하면, 제도권 단체들은 대중에 대한 간접적 행동보다 권력수준으로의 직접행동에 치중해왔으며 특히 상공인단체들은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토대로 하여 가용할 수 있는 다섯가지 수단을 다 동원하여 왔으나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2번, 3번의 수단밖에 쓸수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88년이

그림. 집단이익표출의 분석모델



- 1) C 유형의 약자설명 : M : 현재적(manifest)의 의사표시와 행동  
 L : 잠재적(latent) 의사진달, S : 명시적(Specific) 제안행위.  
 D : 분산적(diffuse) 의사표명(뚜렷한 초점결여), G : 일반(general)인 형태로서 문제제시, P : 특수적(Particular)인 의사표시(매우 구체적인 요구)  
 I : 도구적(instrumental)인 의사표시(협상형태)  
 A : 감정적(affective)인 표현  
 자료 윤희섭 "한국정치과정" 김운태외, 「한국정치론」 박영사, 1982

래 민주화 요구가 확산되어 재벌기업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노사분규가 심각해지자 대기업들도 대중에 대한 PR활동과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농민들도 분산적이기는 하나 조직화에 힘쓰고 집단시위의 결과 수세인하 짚값지지, 농산물수입개방반대 투쟁에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체계적 조직운동의 성숙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이 그동안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의 변화에 의하여 다원화사회로 질적 변화를 하게된 만큼 국가의 체제도 종래의 국가조합주의적 이익대표체계로부터 명실공히 다원주의적 이익대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옳은 방향이라면 농민조직도 이에 부응한 자기혁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정치 경제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UR협상이 타결되면 무역자유화만이 아니라 정치에 의한 생산보조도 상당히 제약되어 갈 것인바 지역단위의 주민자치단체와 농민조직의 역할이 크게 부상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 3 농민협동조합의 당면과제와 발전 방향

#### 가. 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개혁역할의 분담

한국농업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UR타결에 이어지는 수입자유화전망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첫째로 요구되는 것은 산업사회에 농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일이다. 부존된 자연자원이 빈약한 나라일지라도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된 복지사회를 건설하려면 건설한 농업기반을 국내에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둘째는 국제화된 경제여건하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줄기차게 펼쳐 나가야 한다. 이러한 두가지 기본과제를 위하여 관련된 각자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열거한

다면, 첫째 새로운 농업을 창조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수입개방품목에 대한 보조 차원이 아닌 농업체건을 위한 인적, 물적 자본형성을 위한 10년 계획을 세워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 둘째, 현재 진행중인 UR협상에서 기간작목 20개 이상에 대하여 자유화의무면제를 받고 상당수의 품목에 대하여 적어도 10년이상의 긴 유예기간을 얻어내야 한다. 셋째, 이제까지와 같은 국경보호하에서 가졌던 단일한 자세는 허용될 수 없으며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소득원 확충(부가가치 가공등), 생산비 절감, 농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제도 개혁(각종 법령 - 농산물유통관계법, 주세법, 식품위생법, 재해대책법, 부가가치세법등 개정)과 공공투자 확대(농지기반 정비, 기술개발, 농산물 가격안정, 농축산물보험제도 도입 등)을 지체없이 단행해야 한다.

넷째, UR타결후에는 농업에 대한 직접적 정부보조등이 크게 제한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농업·농촌에 대한 역할이 커질것인 바, 도농통합적 지역 사회경제개발계획과 그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할시와 도, 작은 시(인구 10만미만)와 군을 재통합하는 정치구역개정을 단행하고 완전한 민주적 지방자치체를 정착시켜야 한다. 다섯째, 농산물의 품질을 개선하고 유통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등급화, 규격화를 촉진하고 신뢰성 있는 식품검사제와 품질관리제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수입식품에 대하여는 관과 민의 품질검사제와 산업피해구제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소비자 자율권을 보호하고 생활운동을 통하여 생산자협동조합과 연대하여 농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곱째, 농민조직단체에 관한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 현재 농협, 축협등 농업협동조합은 사업과 농정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바 모순현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편 최근 제도권 밖에서 여러 농민운동단체가 자생적으로 탄생하여 각기 농민이익을 대변·대표한다고 주장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농업발전을 위한 사업에 전념하는 농민협동조합조직과 농정생활

또는 농민이익대표를 위한 전국적 조직은 분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조직은 각종 농민협동조합과 협회등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조직으로 할 수도 있고 농민들이 선출한 직능대표로 구성된 농업회의소 같은 형태를 갖출 수도 있을 것이다. 농민 가운데서도 품목과 계층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바 자유사회에서는 여러 이익단체가 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하겠으나 제도권내에서 트인 언론과 정통적 대표성을 가진 농정단체가 큰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여덟째, 농업재건과 수입개방대책사업의 추진상황을 검토 평가하기 위하여 국회, 행정부, 농민이익단체, 학계의 전문가 대표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한다. 매년 분기마다 모임을 갖고 정보교환, 토의, 분석평가와 건의를 하게 한다.

다음 소비자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생활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여 개방화된 시장에서 「소비자가 주인」의 위치를 되찾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케 하여야 한다. 둘째, 도시민들은 복지사회와 식량안보와의 관계, 식량뿐만 아니라 환경제도 공급하는 농업의 다양한 역할을 잘 이해하고 농민들과의 인적교류, 도시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 권장(농촌환경포함),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도농간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하겠다. 셋째, 농산물 또는 식품의 안정성, 품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터득하여 상품성향상을 소비자들이 유도하도록 되어야 한다.

한편, 재계에서는 어떠한 입장에 서야 할 것인가. 첫째 공업화과정에서 농업·농민이 이룩한 기여에 대한 공평한 인식과 아울러 고도산업사회건설을 위한 농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 공산품수출에는 좋은 대외 환경이 조성될 것인 바 득리자로서 실리자(농민 포함)와 아픔과 부담을 나누어 갖는 자세와 행동이 요구된다. 특히 세계(그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들은 무역확대(수출과 수입)를 통하여 얻은 이익의 일부를 농어촌발전기금에 기탁하거나

첨단적 농업기술개발지원에 충당하는 배려가 요망된다. 셋째, 농산물과 식품의 시장유통에 관하여 이는 상인자본 또는 유통기업이 독점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일부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자생적 협동조합이 맡게 함으로서 공정한 시장경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산자인 농민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유통개선 포함)을 달성할 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정직, 공정, 협동, 능률에 바탕을 둔 생산, 유통의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농산물거래에 신용을 지키고 공정한 주고받음이 일상화되어야 하며 영세성 극복을 위하여(경영규모 확대, 시장교섭력 강화) 각종 협동조직을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국민경제 발전과 오늘날 경제안정을 위하여 농업·농민이 기여한 바가 막중함을 이해하고 긍지를 갖고 농업을 지키려는 의지와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어려운 때에 주체적인 농민 스스로 실망하고 농심을 상실한다면 농업의 내일에 대하여 누구도 관심을 기우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정치적 각성을 고양하여 의회민주주의의 정치권에 농업과 농민의 이익을 대변·대표하는 적절한 입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농가연구가 줄고 농산물 수입자유화로 국내시장이 개방되면 소수자로 전락한 농민은 정당한 주장을 펴나가기 위하여 조직력, 성실성과 이론무장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농민협동조합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까지의 국경보호시대와는 다른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농협은 새로 태어나는 각오로 자기혁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UR협상이 타결되면 국경이란 보호벽이 단계적으로 거의 사라지고 중앙정부의 각종 보조정책이 큰 제약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의 체문제는 농민과 그 단체들의 이니시아티브에 의하여 풀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나. 농민협동조합의 발전방향

### (1)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농협역할의 재조명

한국농업은 멀지않아 영세하고 능률이 낮은 산업 구조에도 불구하고 광대한 부존자원을 가진 신대륙 농업과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다. 일본과 유럽은 우리와 비슷한 자원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농도높은 보호정책과 막대한 기반투자 그리고 성숙한 협동조합조직으로 말미암아 UR협상에서 비교적 여유있는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다.

진술한 바와 같이 한국농업의 첫째, 기본과제는 생산성 제고와 품질혁명이라 할 수 있으며, 둘째는 이러한 과업을 자연상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생산, 이용할 수 있는 경영방식에 의하여 이룩하는 일이다. 현재의 농민협동조합은 이러한 관점에서 재검증이 불가피한 것이다.

농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는 품종개량, 재배 또는 사육법, 병해충 방제, 가공법 등 생물학적, 화학적, 기계학적 제기술을 지속적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의 관점에서 개량하고 개발하여 이를 농가에 보급시켜 생산성을 제고하고 품질을 개선함인데 이에는 국공립 시험연구기관과 학계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업계에서는 현장 경험과 문제들을 연구담당기관(자)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하고 연구성과의 현장적응시험과 제품검사기능을 자체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자조금(check-off)을 조성하여 개발연구에 투입하는 등 공조노력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조직·경영혁신을 위하여는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을 통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을 통하여 범위의 경제성을 실현시켜 단위생산비를 감축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적 발전은 정부의 지시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경쟁의 압력에 의하여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순리인 것이다. 수직적 통합을 보통 계열화라고 부르고 있는 바 그 주체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다. 이로서 양계업의 계열화는 농림수산부가 주

관하여 주로 기업중심으로 추진중이며 육계에 8계 업체, 산란계에 1개업체가 선정되어 시행중인 바 협동조합으로서는 서울 경기 육계조합이 육계에, 오경농장(혈업농들과 개인농가들의 수평적 수직적 통합조직)이 참가하고 있다. 경종분야에서도 농가가 가공기업 또는 대량수요자에 대한 원료의 공급계약을 맺고 있으나 농민조직을 통하지 않으면 매우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육계의 경우 계열화를 통하여 병아리, 사료, 자재, 도계등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중간이윤을 절약하고 계획적 생산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품질관리를 쉽게 하게 함으로써 그 생산비는 30% 내외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그 민주관리체제가 강점과 함께 약점을 가지고 있는 바 의사결정의 집단성이 가져오는 기민성 결여, 잉여금의 전액 자본화 곤란, 전문경영인의 확보난 등 때문에 이러한 취약점을 전조합원의 이해 협력과 리더십의 헌신적 노력으로 극복하지 않는 한 사기업과 경쟁은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제화의 물결로 치열해지지만 하는 개방된 시장 경쟁에서 협동조합이 직면한 도전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 육계시장에서 협동조합의 점유율은 과거 20년동안 거의 1/3로 줄었으며 영국의 소비자 협동조합도 근래 크게 쇠퇴하고 있음은 경종으로 삼아야 할 현실이다. 사회적 진화론은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는 어떤 것이든 존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 협동조합의 현상이 아무리 숭고할지라도 실제 운영에서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기존이해관계 집착에만 급급한다면 멀지않아 도태되고 말 것은 명백한 일이다.

### (2) 지역적 종합단협과 업종 또는 전문 단협(특수조합)과의 기능 재조정

원래 농협은 개별 농민으로서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농업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그 존재이유가 있는 만큼 농업이 상업화되고 전문화되면 이에 상응한 변화가 조직과 경영에

도입되는 것이 순리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회조직이 탄생, 지속되면 현존하는 조직을 둘러싸고 이해가 엇갈리는 집단이 생기기 마련이다. 만약 혁신이 요구될 때 이를 거부하는 집단의 세력이 우세하여 저항하게 되면 조직의 내발적 변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의 현존하는 단위농협과 지역축협은 대체적으로 읍면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역을 조합구역으로 삼고 있으며 업무형태도 신용, 판매, 구매, 이익사업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한편 특수조합 또는 전문단협인 원예조합이나 업종축협은 품목 또는 기능의 전문화가 특징이고 농업의 상업화 전문화에 발맞추어 분화 발전할 것이 기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조합도 최근 관계법 개정 에 의하여 신용업무가 허용됨에 따라 거의 모든 조합들이 업무의 다각화를 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전문농협의 특징이 퇴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이유로서 내세우고 있는 것인 언필 영농자금 또는 사업자금의 조달이며 경제사업과의 보완성 실현이다.

그러면 이러한 전농민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포함한 겸영화가 지금 협동조합들이 해야 할 과제 수행에 어떠한 영향과 부작용을 낳고 있는가. 첫째 문제는 조합의 경영수지위주의 극히 보수적인 경영방식이 팽배하여 조합원 농민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마케팅이나 가공사업등의 개척에 관하여는 소극적이거나 업무축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둘째 각종 금융기관의 지방도시, 농촌에의 대거 진출과 함께 협동조합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부실조합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자율화 개방화는 크나큰 도전인 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경영체의 대형화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한국의 협동조합영역은 이에 아랑곳 없이 서로 혼전에 열중하고 있는 양상이라면 과연 지나친 표현일까, 개혁의 방향은 먼저 농업협동조합은 단협의 겸영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농촌의 과소화 혼주화에 따라 농촌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사업(생활, 문화등)도 개발하고 농민의 소득

원(관광농업 등)도 적극 찾아내며 농지임대차, 농작업위탁 알선 등으로 농지와 작업의 유통화를 촉진시키는 일도 수행하고 특히 농산물 유통혁신에 역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 경영이 부실한 단협들은 과감히 합병토록 유도한다.

앞으로 한국 농업의 생존은 지역농업의 특성화, 지역화(지역소비자와의 연대, 직거래 확대)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는 바 단위농협은 지역내의 전문농협과 공동으로 이와같은 과업의 핵심적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수조합은 신용업무를 하지 않는 전문농협으로 발전시키고 그 수도 늘려서 다각화하는 농민들의 욕구를 수용하여 협동조합을 통하여 그들의 총체적 시장경쟁력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축산업협동조합은 원래 특수조합이었으나 오늘날 지역축협은 신용사업이 점차 중심부를 차지하면서 겸영형태의 종합단협으로 변하고 있다. 업종축협 또는 신용사업을 겸함으로써 특성이 퇴색하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지역축협은 업종 또는 전문단협으로 발전해 가는 과도형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현재 도시, 근교 또는 순농촌이나의 입지조건에 따라 그 경영중점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업종별 축협은 신용업무를 하지 않고 축종별로 계열화 촉진, 생산개량, 가공 유통의 개선등 업무를 심화시켜가야 할 것이다. 한편 계열화작업에서는 업종축협이 중심이 되고 지역축협(축산계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두 계통을 지역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과 가공과 같은 업무는 위험부담도 크고 기민한 의사결정과 유능한 전문경영인을 필요로 함으로 여러 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가 될 수 있다.

### (3) 연합조직과 농정활동의 체계적재편

농협과 축협이 서로 분리된 채 단협과 중앙회로 각각 이단계 조직체제를 가지고 있는 바, 이는 중앙집권적 관리에는 편리한 형태라 할 수 있으나 단위

조합들이 전문화하고 분야별 사업규모가 커지며 조직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 같다. 먼저 사업의 입장에서 보면 작목별 또는 기능별로 여러가지 전문단협이 발달하면 자연히 전국적 또는 지역별 연합조직이 생기기 마련이다(현재도 전국낙농조합연합회가 임의단체로 구성되고 있음) 이렇게 되면 이러한 연합회와 현존 중앙회는 일부 기능에서 중복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알력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책 시나리오는 세가지로 구상할 수 있다. 첫째 시나리오는 농정활동의 기능을 각 협동조합계통에서 떼어내서 이를 전담하는 가칭 전국농민협동조합연맹을 창립하고 이에 농민협동조합만이 아니라 각종협회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한국농업과 농민의 이익을 대변·대표하고 당면한 정책과 중장기 농정과제를 국회와 행정부에 건의하고 농업·식량에 관련한 대외민간외교도 맡도록 한다. 따라서 현재의 두 중앙회는 사업경영에만 전념토록 하는 것이다. 둘째 시나리오는 농정활동을 현재와 같이 두 중앙회가 담당하되 협의기구를 상설하여 의견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는 업종별 또는 전문단협이 성장하여 전국단위의 연합회를 만들 수 있게 되면 현재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경제사업 또는 기능을 이들에게 점차 이양하고 각 중앙회는 신용 및 공제사업본부와 회원조합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사 그리고 농정활동을 담당하는 체제로 기능을 조정한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농협과 축협을 전면적으로 재편하여 사종경영조합은 단위농협만 허용하고 특수농협, 지역축협, 업종별 축협은 모두 경제사업만 하는 전문농협으로 육성하여 전국단위의 사업별 또는 전문농협별연합회를 조직케 하는 동시에 농정활동을 전담하는 중앙조직을 별도로 세우는 방안이다(현재 일본의 모델과 유사). 이상의 세가지 대안중 제여건으로 보아 두번째 시나리오가 당장 실현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세번째 방안이 보다 바람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4 결 언

국제화의 거센 파도는 국경을 넘어 우리 농민 개인의 농장과 부엌에까지 밀려오고 있다. 영세한 농민개인들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이 물결에 슬기롭게 맞설 수 없으며 오직 정부와 국민들의 뒷바침과 농민들의 자생적 협동조직을 통해서만이 효과적으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 어떠한 개혁이든 사람들을 이득자와 실리자로 나누는 것이 통례이므로 대아를 위하여 목전의 소아적 기득권을 일부 양보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개혁의 실현은 어렵게 된다. 현재 농업과 관련하여 협동조합도 두 줄기로 나누어있고 협회도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농민운동단체도 몇갈래로 나누어 있는 현실인바 범농업적 이익을 대변·대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금부터 긴급히 필요한 것은 각종의 농민조직이 서로 연대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됨과 동시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현장의 문제해결을 실효있게 담당할 수 있는 전문화된 농민조직이 발전되어야 하겠다.

